

이원택, '내발적 발전' 전략 구체화

<민주 전북지사 예비후보>

전북미래산업R&D포럼 정책제안서 전달... 새만금 중심 재생에너지·피지컬AI·SOC 등 전략 등 담겨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예비후보가 도내 대학교수들과 함께 전북의 내발적 발전 전략 구체화에 나섰다.

이 후보가 제시한 내발적 발전 전략은 지역의 자원과 인재, 산업 역량을 기반으로 전북 스스로 성장 동력을 만들어가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전북미래산업R&D포럼은 12일 전북대학교 인문사회관에서 이 후보에게 2026 전북 내발적 발전 구상 정책제안서를 전달했다.

포럼은 전북의 미래산업 육성과 지역 혁신 생태계 구축을 위해 구성된 정책 연구 단체로 전북대학교, 우석대학교, 원광대학교, 국립군산대학교, 전주대학교, 전주교육대학교 등 도내의 대학교수 100여명이 참여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주상현 전북대 사회과학대학 학장을 비롯해 권대규·박진희·송지환·안동준·이동기·이상완·이호·조용진 교수 등이 참석했다.

정책제안서에는 △새만금을 중심으로 한 재생에너지·그린수소·RE100 산업벨트 구축 △피지컬AI·농업로봇·특장차AI·농생명 바이오산업 육성 △2전주하이테크올림픽 유치 △전주~대구 고속도로 및 전주~김천 철도 건설 △새만금 국제공항 확대 △K-컬처·K-푸드·전통문화·관광산업 융합 전략 등이 담겼다.

특히 전북을 에너지 대전환과 첨단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예비후보가 도내 대학교수들과 함께 전북의 '내발적 발전' 전략 구체화에 나선 가운데, 12일 전북미래산업R&D포럼으로부터 정책제안서를 전달받은 뒤 관계자들과 화이팅을 하고 있다.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하고, 올림피아 유치와 문화산업 활성화를 통해 국가균형발전과 문화수도 도약을 추진해야 한다는 비전이 제시됐다.

허강무 공동대표는 "전북은 미래산업과 에너지 전환 균형발전, 문화 융성, 농생명 혁신의 중심축으로 도약할

준비를 마쳤다"며 "정책 제안이 이원택 후보의 추진력과 만나 전북 잠재력을 폭발시키는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포럼 측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정책 제안을 통해 전북 발전 전략 마련에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원택 예비후보는 "전북 발전을 현장에서 연구하고 고민해 온 교수들의 정책 제안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지역 인재와 산업, 대학과 연구기관이 함께하는 내발적 발전 전략으로 전북 대도약 시대를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치생명 건다더니 황실수설 일관”

김관영 선대위, 이원택 발언 전문 공개

“사실 확인되면 후보 사퇴 마땅한 수순” 주장

무소속 김관영 전북도지사 예비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12일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예비후보를 향해 “자신이 밝은 말에 대해 정확한 해명이 필요한데도 말 바꾸기로 일관하고 있다”며 책임을 묻는 답변을 요구하는 공개 질의를 제차 이어갔다.

선대위는 이날 성명을 통해 “이 예비후보는 11일 전북대 피지컬AI 실증 랩에서 행사를 마친 뒤 기자들과 질의 과정에서 도저히 이해하지 못할 해명으로 언론인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들었다”며 “지난 3월 12일 기자회견장에서 공개된 발언에 대해 스스로 팩트 체크해 답변해 줄 것을 공식 요구한다”고 밝혔다.

선대위가 공개한 당시 질의응답은 다음과 같다.

“언론인 질문=‘김 지사가 내란범죄 의혹이 사실로 판명될 경우 정치생명을 걸겠다고 했는데 이 의원도 (사실이 아닐 경우) 정치생명 걸 것이지?’ 이 후보 답변=‘정치인은 행위 행위 하나에 다 정치생명을 거는 것인데 저도 정치생명을 건다고 봅니다. 제가 지금까지 (내란범죄) 의혹 제기한 것이 잘못됐다면 제가 사과하고 또 필요하면 제가 책임도 지겠습니다. 저도 당연히 물러나야 한다고 봅니다.’

이 후보 답변=‘이것은 진실공방도 있지만 허위사실 문제도 있습니다. 나중에 가면 허위사실(0) 어떻게 되는지 아시겠습니까?’

선대위는 “이 예비후보는 명백하게 기록에 남아 있는 자신의 발언을 뒤집

는 행위를 하고 있다”며 “내란범죄 의혹이 사실이 아닐 경우 책임을 지고 물러나겠다고 발언한 적이 진정 없는 것인지 분명히 답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내란범죄 의혹을 둘러싼 진실 공방이 결국 허위사실 공보 혐의로 직결됨을 명시한 발언에 대해서도 발언 사실 유무를 적시하라”고 요구했다.

또 “당시 워킹유 SNS에 수많은 올라와 있다”며 “특검 조사 결과 무혐의 결정이 난 만큼 당시 상황이 사실임을 인정한다면 즉각 공당 공천후보답게 책임지고 후보사에서 사퇴하는 게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선대위는 이 예비후보가 전북대 기자 질의 과정에서 기존 발언에 대해 “사법적 기소를 말한 적이 없다”, “선출직 공직자의 도덕적 책무에 책임을 지겠다는 말이었다”고 해

명한 데 대해서도 “알리가 맞지 않는 발언”이라며 “지난 3월 12일 공언을 뒤집는 또 다른 허위 발언”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특검 수사가 생생한 증거를 조사했는지도 확인해 봐야 한다는 등 특검 수사 결과를 인정하지 못하는 발언도 했다”며 “9명의 도정 공무원과 김 지사가 특검에 물려가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다는 사실을 외면하는 것 인지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선대위는 “이 예비후보는 자신이 강력 주장했던 반안들을 회피하거나 축소·왜곡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민주당 공천후보의 정당함을 견지하는 게 옳다”며 “계속 분말을 적시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한다면 강력한 민심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특검 무혐의로 ‘현금살포 사건’ 본질 가릴 수 없어”

이원택 도지사 후보

김관영 후보 향해 “정치적 책임 회피 말라”

정부 책임자로서 보여준 판단과 대응에 대한 정치적 책임의 문제였다”고 밝혔다.

또 “사법기관이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 판단한 것과 민주당정질서에 대한 충분한 인식과 책임 있는 판단을 했는지는 전혀 다른 문제”라며 “도민 의 알 권리 차원에서 이를 공론화하는 것은 민주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의 당연한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김 후보의 민주당 제명 사유와 관련해서도 “핵심은 CCTV로 확인된 현금 제공 사실”이라며 “현금 제공 행위가 ‘삼촌의 마음을 담은 선의’였다는 해명은 선거 민주주의의 기

본 원칙을 지나치게 가볍게 보는 태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선거 과정에서 현금이 오가는 행위는 명분과 관계없이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 형성과 공정한 선거 질서를 훼손할 수 있는 중대한 문제”라며 “김 후보가 자신의 현금 제공 사실에 대한 책임 대신 정치적 음모론을 제기하는 것은 전형적인 책임 회피이자 본질 흐리기”라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또 “김 후보에게 필요한 것은 피해자 코스프레나 무소속 출마 강행이 아니라 현금 제공 사실과 민주당 제명에 대해 도민 앞에 진솔하게 사과하고 책임지는 자세”라고 밝혔다.

도지사 후보들과 정책간담회

노조는 건강권 기본조례 제정, 보건 의료 예산 10% 확대, 보건 의료 전달국 신설, 공공병원 지원 강화, 보건 의료 인력지원센터 설치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또 주저임제 도입과 표준임금·노동조건 마련도 요구했다.

홍수정 부부장은 “전북의 보건 의료 예산 비중이 전국 최하위권”이라며 “도민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정책 공약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건의료노조 전북, “건강·돌봄·생명 도시 전북 공약화 필요”

전북보건의료노조총연합회 전북지역본부(본부장 홍수정)는 11일과 12일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도지사 후보 진보당 백승재 도지사 후보와 각각 정책 간담회를 열고 보건 의료·돌봄 정책 제언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송전선로 건설 보류 환영”

김관영 도지사 예비후보 “전북 중심 에너지 대전환을”



김관영 전북도지사 예비후보가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송전선로 건설 절차의 일시 보류 결정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며, 전북을 중심으로 한 에너지 지산지소(地産地消) 산업전략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예비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12일 논평을 통해 “이번 결정은 지역균형발전과 에너지 지산지소 원칙이 실제 정책 방향으로 구체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이재명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철학과도 맞닿아 있다”고 평가했다.

앞서 김성환 기후에너지부 장관은 지난 11일 국회에서 ‘용인반도체 국가산단 재검토와 초고압송전탑 건설 반대 전국행동’과 간담회를 갖고, 향후 한 달간 송전선 건설 절차를 보류한 뒤 현장 방문과 실태 파악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관영 선대위는 이번 정부 결정이 김 후보의 1호 공약인 ‘AI·에너지 대전환’ 정책과도 맞닿아 있다고 강조했다.

선대위는 “김 후보는 전북을 피

지컬 AI 산업수도이자 RE100 중심 에너지 산업 메카로 육성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해왔다”며 “이는 단순한 지역 공약을 넘어 대한민국 산업구조 전환 방향을 선제적으로 제안한 국가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은 대규모 전력을 지방에서 생산해 수도권으로 공급하는 구조로 추진되면서 초고압 송전탑 건설에 따른 주민 갈등과 지역 희생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여기에 막대한 용수 확보 문제가 겹치며 수도권 집중형 산업정책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김관영 선대위는 “전북은 새만금을 중심으로 풍부한 재생에너지 잠재력과 넓은 산업부지, 제조업 기반 인프라를 갖춘 지역”이라며 “피지컬AI 실증사업과 RE100 산업단지 전략을 통해 반도체·AI·데이터센터 등 첨단 산업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는 최적지”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단순히 송전선로 절차를 보완하는 수준에 머물 것이 아니라, 전북과 같은 재생에너지 기반 지역에 반도체·AI·첨단 소재 산업을 분산 배치하는 전략을 과감히 실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만호 기자

“정청래 지도부, 무소속 돌풍 민심 직시해야”

김관영 도지사 후보 선대위

오는 6·3 전국동시지방선거 전북도지사 선거에 도민후보로 출마한 무소속 김관영 예비후보 측이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지도부를 향해 “무소속 돌풍에도 아직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김관영 예비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12일 논평을 내고 “민주당 지도부가 전북지역에서 나타나는 무소속 지지 흐름을 제대로 읽지 못한 채 당원 단속과 경고성 발언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이는 민심에 대한 면피성 대응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정청래 대표이 이날 충북 충주에서 열린 민주당 공천자담회에서 “민주당 당원이기 때문에 당선 가능성이 높은 것”이라며 “내가 잘나서 됐다고 자만하는 순간 당원과 국민으로부터 외면받을 수 있다는 걱정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관영 예비후보 측은 이를 자신들에 대한 우회적 비판으로 해석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 선대위는 “최근

전북도지사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층 상당수가 김관영 후보를 지지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정청래 지도부의 사당화와 불공정 경선에 대한 도민들의 분노가 반영된 결과”라고 주장했다.

또 강준현 수석 대변인의 라디오 인터뷰 발언을 언급하며 “민주당 당원이 무소속 후보를 돕는 것은 해당행위라는 취지의 발언은 사실상 협박성 경고”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의 징계와 공천 과정에 반발해 자발적으로 캠프를 뜬다는 당원들도 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관영 선대위는 “민주당 자체에 대한 애정은 여전히 갖고 있다”면서도 “정청래 지도부가 특정 계파 중심의 사당(私黨) 정치로 민주당을 망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분명히 지적한다”고 밝혔다.

이어 “전북도민들의 분노와 절박함 속에서 출마한 김관영 후보에 대한 비호보다 먼저 공천 과정과 지도부 운영에 대한 사과가 우선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만호 기자

“바이오산업 기반으로 산업생태계 전환”

이학수 정읍시장 예비후보, 일자리·경제 분야 공약 발표



이학수 더불어민주당 정읍시장 예비후보가 민선 9기 지역발전 정책공약 첫 번째 순서로 일자리·경제 분야 세부 공약을 발표하며 “첨단 바이오산업 중심으로 정읍의 산업생태계를 바꾸고, 소득과 소비가 선순환하는 지역 경제 구조를 구축하겠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발표한 일자리·경제 분야 공약은 △새만금 배후 태인 신규산업단지 33만평 조성 관련해 이 예비후보는 “북부권역에 새만금과 연계한 신규 산업단지를 조성해 현대그룹의 새만금 대규모 투자와 연계되는 산업 수요에 대응하겠다”고 했다. 또 바이오 등 신산업 청년 창업·보육공간 확충 공약에 대해서는 “바이오 분야 입주·창업 공간과 농축산용 미생물 공업 인프라를 구축하고, 제약산업 미래인력 양성센터와 연계해 정읍의 미래를 이끌 신산업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AI 데이터센터 유치와 AI 미생물 거점도시 조성 등을 통해 “정읍을 농생명·바이오와 AI 기술이 결합된 미래산업 거점도시로 성장시키겠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단일포복합 국가산업단지 기반 마련 △첨단과학 일반산업단지 5.9만평 확장 △동물의약품 규제자유특구 지정 및 산업화 플랫폼 중심 반려동물산업 육성 등 총 13개 사업이다.

이 가운데 핵심 공약인 새만금 배후 태인 신규산업단지 33만평 조성 관련해 이 예비후보는 “북부권역에 새만금과 연계한 신규 산업단지를 조성해 현대그룹의 새만금 대규모 투자와 연계되는 산업 수요에 대응하겠다”고 했다.

또 바이오 등 신산업 청년 창업·보육공간 확충 공약에 대해서는 “바이오 분야 입주·창업 공간과 농축산용 미생물 공업 인프라를 구축하고, 제약산업 미래인력 양성센터와 연계해 정읍의 미래를 이끌 신산업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AI 데이터센터 유치와 AI 미생물 거점도시 조성 등을 통해 “정읍을 농생명·바이오와 AI 기술이 결합된 미래산업 거점도시로 성장시키겠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이원택 후보는 “보건 의료와 돌봄은 지방정부의 핵심 책무”라며 공공병원 지원과 지역 의료 강화 필요성을 밝혔다. 백승재 후보도 “노동조합을 정책 파트너로 인정해야 한다”며 공공의료 확대와 의료인력 확충에 공감했다.

보건 의료노조는 선거 이후에도 공약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